

## 토 론 요 지 3

이 준 건 박사 (한국공공행정연구원)

첫째,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치 도구화 되어 지역의 유지와 행정만 있고 주민자치를 위한 참여는 한계가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이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적인 지위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이 선출하여야 한다. 선출된 위원들은 자부심은 물론 책임성을 갖고 공공의 이익과 가치추구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자치위원은 정당의 공천으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위원은 위촉권자(지방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으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 이는 주민자치의 커다란 걸림돌이며 자치가 아닌 타지(他治) 또는 종치(從治)가 되며 관치(官治)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진정한 주민자치는 스스로의 자치권을 확보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자율성을 최대한 높여주어야 한다.

둘째,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이 실정에 알맞게 구분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즉 도시와 농어촌지역으로 크게 구분하여 지역실정에 알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도시와 농어촌지역은 근로환경, 생활환경, 교육문화, 삶의가치 등이 다르다.

이처럼 삶의 환경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획일화되어 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도 대부분 복지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근린자치의 목표를 달성하고 참여와 목표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자치기능과 지역복지기능, 문화여가기능, 주민편익기능, 시민교육기능, 지역사회진흥기능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분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주민들의 다양성을 충족시키고 참여의 폭을 확장하고 질적 만족도를 높여 나갈 수 있다.

셋째, 농어촌지역의 문화수준과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 지역의 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산촌개발사업, 거점지역단위개발, 녹색체험마을 등 중앙정부(광역기초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1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이웃 마을 간 많은 확보하기 위한 선의적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심한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이 같은 갈등은 이웃 간 정을 나누며 평온을 유지해 왔던 농어촌 마을이 대립과 반목으로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이다. 이들은 결국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업시행자인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등에 투서와 심지어 고소, 고발 등으로 이어져 사업이 중단되거나 백지화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학습 또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화와 소통을 통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공공의 이익과 지역의 발전을 우선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공공의 문제를 지혜롭게 풀고 특화사업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건강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한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기초단위지역의 작은개념의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며 상생협력에 대한 교육적 차원의 역량강화로 개인의 이해보다 공동의 이해와 공익을 우선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

넷째, 근린자치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율과 높은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대다수 주민들은 주장만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있다. 주민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는 참여와 자율없이 타율에 의해 움직이는 동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민은 관권이나 정치권의 사람이나 전문가들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주민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끌어가야 할 주체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동안 다양한 주민참여는 소수의 전문가나 전문화된 활동가들에 의해 수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 중심의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어 주민들은 지역사회 활동 등에 있어 대상화되면서 위축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고 주민들을 자문 등에 참여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주민자치를 위한 참여라고 할 수 없다. 형식적인 참여가 아닌 문제해결을 위한 민주적인 스스로의 참여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자치가 되어야 한다.